

특별좌담회

#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의 정책적 함의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sup>1)</sup>



○ 참석자(가나다 순)

김용하(순천향대학교 재정경제학부 교수)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용(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기획평가팀장)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

조남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 순(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6년 10월 31일 개최한 「제3회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 2030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의 관련성 및 의의”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조남훈** | 먼저 오늘 토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실천 전략이 포함된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2030(이하 ‘비전2030’로 칭함)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새로마지플랜2010’으로 칭함)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등에 관해 선우덕 박사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조남훈** | 오늘 토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비전2030의 정책적 함의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 비전2030은 사회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새로마지플랜2010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적으

로 비전2030과 새로마지플랜2010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박재용** | 비전2030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전망하고 있으나, 그 배경이 되는 문제점 인식은 기본계획2010과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2030은 장기적인 사회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 플랜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회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과연 2030년에 필요한 경제활동 적정인구는 몇 명인가”, “2030년도의 인구구조



▲ 조남훈 박사

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전망이 비전2030과 새로마지플랜2010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새로마지플랜2010보다 비전2030의 목표치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전2030이 어떻게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수치들은 무엇을 기초로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삼식** |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전2030은 기본적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현상과 미래에 도래될 현상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삼식 박사

새로마지플랜2010도 비전2030과 동일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기본시각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전2030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다른 사회제 현상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마지플랜2010은 비전2030의 부분으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비전2030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비전2030에서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부문에 불과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우덕** | OECD 국가에서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국가들이 증가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짐에 따라 고령사회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7개의 원칙중 하나가 국가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2030과 새로마지플랜2010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 중

요한 출발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 순** | 비전2030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하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새로마지플랜2010이나 비전2030의 내용은 저성장 등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경희** | 비전2030에서는 고령사회대책과 관련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은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회, 치매·중풍 등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사회, 노인에게 필요한 안전한 주거공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가 활발한 사회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와 정책적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전2030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포괄하여 한국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연의 목표는 아니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제한점이며, 이러한 국가목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고령사회정책 부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마지플랜2010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경수** | 외국의 경우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조사통계, 보고서, 모델 등 활용 가능한 자료가 풍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우 빈약합니다. 비전2030 작성에 직접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자료부족 문제는 비전2030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2030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많



▲ 정경희 박사

은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어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저출산의 비중은 낮고 고령화는 높은 것 같아서 비전2030에서는 저출산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인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적정한 인구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인구구조 변화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고,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조남훈** | 지금까지 참석자 여러분의 토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전2030과 새로



▲ 김용하 교수

마지플랜2010의 기본시각이나 목표는 모두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비전2030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경제 제 부분을 포괄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새로마지플랜2010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부터는 비전2030과 새로마지플랜2010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용하** | 비전2030이나 새로마지플랜2010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우리 사회는 과거의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와 걱정, 불안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사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으로 고령화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적어지면 생산력이 저하되고, 점차 소비중심적인 사회로 바뀌면서 국가경쟁력은 낮아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령사회를 맞이한 서

구의 국가들도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오래 사니까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런 합리적인 선택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일자리가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며,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청년실업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용**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출산·양육을 너무 사회적 책임으로만 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주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보상 중심으로만 다루어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성애를 배제하는 보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효과 측면에서 효과성이 너무 낮은 정책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임 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 지원이 출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한명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장, 자녀양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야 할 것입니다.

**김진수** |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지금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는데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봐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계는 자녀효용의 개념이 강했고, 가계에서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가계 밖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들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통해 얻는 생산과 가계 내에서 얻는 생산을 비교했을 때, 사회에서 얻는 생산이 더 크다고 느끼게 되면 사회활동을 선택



▲ 박재용 교수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출산의 기쁨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가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용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출산 문제는 보상적 접근보다는 개인의 판단,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문제들이 단지 보육시설만 확충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머지 일하지 않은 계층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이 보다 필요합니다.

**최 순**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8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는 데에서 문제가 출발했다면, 합계출산율 1.08이 왜 일어



▲ 최순 교수

났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합계출산율이 1.08이니까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저하는 기혼부인의 출산율 감소와 미혼 여성의 결혼 연기, 독신 경향 증가 때문이며, 이 중 미혼이나 독신의 증가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비전2030에서 여러 정책을 담고 있는데, 기혼인구의 출산율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낳을 만큼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자녀 선호는 자녀의 효용성이 변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미혼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고, 졸업하고 일정 기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시장에서조차 퇴출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실업률도 높아지면서 남성의 결혼 연령까지 상승했습니다. 김용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시장으로의 진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초혼 연령을 낮추지 못하면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조남훈** | 최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결혼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비전2030에서도 학제개편과 더불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청년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초혼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경수** |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시간이고 시간에 대한 비용(cost)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여성의 시간을 많이 쓰다보니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출산을 높이기 위해 정책 목표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사용하여 비용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간을 줄여야하고 공·사교육을 대폭 개혁해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 이후 방과후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은 긴데 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낮습니다. 비합리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1.5 수준으로 올리자는 식의 접근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비전2030의 정책 과제들 속에 함의되어 있는데 이런 점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삼식** | 새로마지플랜2010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저출산 원인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저출산의 인구학적 원인으로 미혼층의 미혼 및 비혼화 현상이 제기되었습니다. 미혼인구에 대해 막연하거나 미시적인 접근만으로 적령기 결혼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마지플랜2010뿐만 아니라 비전2030에서는 적령기 결혼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학령기예의 적절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제개편과 school-to-work 및 work-to-school 등 현재의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이들이 졸업 후 곧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환경 내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저출산 대



▲ 최경수 박사

책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등)간의 충분한 이해와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훈** | 비전2030과 새로마지플랜2010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저출산 대응에 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에 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수** | 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취업 및 노동시장의 문제와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의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퇴직금 제도가 유지되어 1년에 1개월분이 적립되므로 이를 퇴직연금으로 전



▲ 김진수 교수

환할 경우 8.3%가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 9%와 건강보험을 포함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식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공공보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좀더 많은 문제가 부각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정부 정책의 예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논의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의하면 비판받게 되고 비판 대상이 되는 말은 서로 꺼리기 때문에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전2030에 내용이 없다는 등의 비판 보다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진수** |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협을 거론할 때 질병, 노령 등을 얘기하는데 질병과 노령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질병과 노령을 사회적 위협으로 같이 접근했었던 것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료부분과 연금, 보험 등의 사회보장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계층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리더십, 건강

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인집단, 소득이나 재산은 없지만 리더십과 건강을 가지고 있는 노인집단, 모두가 없는 노인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노인들을 보호하고 보상해야 할 수급자로만 보아왔지만, 소득, 재산, 리더십, 건강을 모두 갖춘 노인들은 공급자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노동시장을 벗어났을 때의 수반되는 문제로 연금이나 보장 등의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연금형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당연히 연금체제로 가야 합니다.

**선우덕** | 새로마지플랜2010과 비전2030에서 유사하게 노후의 안정된 소득원 보장,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후의 사회활동 여건 조성 등을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설정은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세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있습니다. 노인건강에 국한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략들이 중요

합니다. 사후적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필요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이에는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전환,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수준 하락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상당한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및 가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의 장기요양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및 요양시설 인프라 조기 확충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동하기 좋은 환경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기반을 구축함으로써



▲ 선우덕 박사

노인세대를 포함한 전국민이 손쉽게 건강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 비전2030에서도 노동시장과 연금과의 연계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연계를 통한 연금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미리 논의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서서히 퇴출되면서 보상적 차원에서 연금과 연계되는 방안, 우리는 소위 미끄럼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요양 기반에 대한 것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수발보험을 차차 11%, 35%, 100%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령기초연금 8만5천원은 정책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간에 정책적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경희** | 새로마지플랜2010에서 노후 소득보장책으로 현재의 소득보장체계 틀 안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 및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

후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에 있어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노후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준비 부족 및 가족기능 약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퇴직연금의 조기정착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적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통한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상호 협조하는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1층 보장)하고, 기존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통하여 기업이 피용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보충적으로 지원(2층 보장)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보험상품의 가입을 지원(3층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이 보호와 안전 속에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교통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여가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전략으로 설정되

어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자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 외에도, 노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유쾌하고 신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여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남훈** | 아무래도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재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서로 다른 계층이나 세대일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 여러분들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최경수** | 비전2030은 작년 가을부터 착수해서 겨울에 매듭을 지어 대통령 연석보고회에서 정책 운영을 위한 화두를 위한 것이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발표하면서 내용보다는 비판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계획이 붙은 이유도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의에 휩쓸려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0조원이라는 소요예산을 포함하

여 기획예산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였는데 시안에 불과한 계획이 공개되다 보니 재원과 관련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재용** | 비전2030의 고령사회대책을 살펴보면, 복지측면의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가 보장측면만 강조하다보니 재원조달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을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청장년층의 대책도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년층의 부담능력, 부담비율,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비전2030과 새로마지플랜2010은 25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시기의 사회현상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이러한 비전 제시가 고령층에겐 희망을 주겠지만, 청장년층에겐 고통의 의미로 보여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하** |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끌고 왔는데 현재의 패러다임이 유지 가능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2030이나 새로마지플랜 2010은 제반 사회 현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바뀌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

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식하면서도 정작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재원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복지비를 GDP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지출했다는 식의 계산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복지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느냐는 각국의 환경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 중심의 문제 해결방식이고 서구는 사회중심의 문제 해결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로 복지수준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낮아도 관련 문제는 잘 해결된다고 봅니다.

**조남훈** |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의 감소나 노령화의 속도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1.08명이라는 초 저출산율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출산율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향

후 30년 이내에 태어날 신세대는 약 49%가 감소되어 인구규모의 감소는 물론이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이고 외국으로부터의 인구유입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진수** |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고용허가제 이후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해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재 3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서도 정부에서 허가만 해놓고 조용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출산율 측면에서 본다면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집단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집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유형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는 성격의 외국인 근로자이며, 다른 한 유형은 3D업종에서와 같이 내국인 근로자와 일자리를 분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남훈** | 김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은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도 우수외국인력 유치,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스웨덴 등을 포함한 저출산 선진국에서의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추진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고, 비전2030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삼식** |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수용정책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인 노동력 활용 측면이 강조되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민수용정책은 이민자의 인구구조와 이들의 출산율에 따라 전체 인구의 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장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부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이 긴요하나, 이민수용정책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변동추이와 향후 출산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회문제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훈** | 오늘 토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과 관련하여 비

전2030이 지니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전 2030이 초장기적 계획이고 새로마지플랜2010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추구하는 세부 항목별 목표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새로마지플랜2010은 비전2030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것이고, 비전2030에 포함된 제반 정책목표와 세부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전2030이나 새로마지플랜2010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폭넓은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오늘 좌담회를 통해 볼 때, 비전2030에 포함된 정책목표와 세부과제 내용 하나 하나는 매우 타당하다고 인식되지만 그간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은 그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비전2030에 포함된 세부목표와 과제가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